

『한국의 인구 1, 2』.

김두섭 · 박상태 · 은기수 편. 통계청. 2003년

한국인구 75년의 발자취

이 흥 탁*

I. 인구자료 축적의 새로운 전기

케임브리지대학 단과대학의 하나인 Jesus College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방문객의 눈길을 끄는 것은 맬서스의 인구론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는 Malthus Library이다. 무심코 지나치는 방문객들에게는 입구에 있는 Old Library만 눈에 뜨일 뿐,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맬서스 도서관과, 이곳에서 맬서스가 저술한 인구론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북미, 독일, 일본 등지에서 온 백발이 성성한 노학자들의 모습을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맬서스의 모교였던 Jesus College는 세계 각 국에서 지금도 계속 발간되고 있는 인구에 관련된 자료들을 차곡차곡 수집보관하고 있다. 이처럼 귀중한 인구관련 자료의 정리나 보관은 후일 이 분야를 전공하게 될 후학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연구여건을 제공해 주게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에 통계청에 의해 발간된 《한국의 인구》1권과 2권은 한국 인구센서스 역사를 담고 있는 귀중한 자료로 앞으로 이 분야를 연구하는 분들에게 필독서로 다루어 질 것이 분명하다. 여러 명의 인구학자들에 의해 집필된 이 두 권의 책은 통계청에서 200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토대로 발간한 《한국의 주택》과 함께 2000년도 인구주택자료 분석 삼부작의 일부를 이룬다. 먼저 이처럼 보배로운 자료를 몇 권의 책으로 엮어 두어 귀중한 사료로 보관하는데 중추역할을 한 통계청과 집필진 인구학자 여러분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다.

먼저 《한국의 인구》의 전반적인 골격을 보면, 전체가 19장으로 나누어져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인구성장, 출산력, 사망력, 국내외의 인구이동, 성별·연령별구조, 혼인력, 노동력, 인구 노령화, 인구분포와 도시화 및 인구추계와 인구정책분야를 두루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중요성은 1925년 인구센서스가 시작된 이후 이제까지 집계된 센서스 자료들을 부분적으로나마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국내 인구자료의 종합적인 축적에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사실이다. 물론 1995년의 인구주택 총조사자료도 인구학자들에 의해 종합 분석되어 각 분석 주제별로 단행본으로 발간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처럼 두 권의 책으로 간행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최근의 급속한 사회변동의 속도와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인구센서스 조사방법에 대한 실효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이삼식 외, 2002: 89-92, 114-116) 이번 《한국의 인구》발간은 앞으로 인구센서스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게 한다. 즉 정보사회에 부합하는 새로운 조사항목의 설정과 이러한 조사항목을 도출하는데 요구되는 조사기법의 개발 내지는 인구센서스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한 단기, 장기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II. 부문별 내용분석

제 1장은 한국의 인구조사 자료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로 인구센서스와 인구동태통계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1937년 일제 하에서 『조선인구 동태조사규칙』이 제정되면서 그 후 매년 『조선인구 동태통계』로 발간되었다. 이 인구동태통계자료는 일제가 한반도를 식민지화하기 위한 통제수단으로 사용되었던 만큼 이 시기에 집계된 동태통계는 앞으로 인구학자들에 의해 보다 면밀하게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1919년의 3.1 운동이후 일본은 한반도의 사회경제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각 도의 자산가 분포도』와 『시국사범 검거일람도』를 작성하여 당시 한반도의 부의 분포도와 치안질서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던 만큼(중앙일보, 1996, 3월 1일: 1면, 22면) 이 시기에 집계되었던 각종 인구관련 통계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925년에서 1940년에 걸친 세칭 간이국세조사 및 국세조사자료와 1944년의 인구조사자료에 대해서는 이 기간에 집계된 인구동태통계자료와 함께 보다 철저한 해석과 분석이 이루어져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서 인구통계자료가 차지하였던 막중한 비중을 재검

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연구비를 집중 투여해야 할 분야가 바로 이 영역이 아닌가 생각된다.

역시 제 1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센서스의 발전방향에 관한 내용에서는 조사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조사방법의 개발이 급선무임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지역사회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ACS)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매 5년 또는 10년마다 이루어지는 현행 인구센서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다. 좀더 욕심을 낸다면, 앞으로 통계청 홈페이지에 인구통계자료 수집방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수록하여 인구통계자료를 활용하는 일반인들이 그들이 사용하는 자료의 수집경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미국의 Current Population Survey (U.S. Census Bureau, 2002)에서 공개하고 있는 조사방법론 Technical Paper가 좋은 예가 된다.

제 2장의 인구성장과 변천을 다루는 분야에서는 한국인구의 성장과 변천 과정을 1910년 이전의 전통적 성장기, 1910-1945년의 초기 변천기, 1945-1960년의 혼란기, 1960-1985년의 후기 변천기, 그리고 1985년 이후의 재 안정기 5개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이 장에서 집필자는 한국의 출산력 변천양상을 설명하면서 출산력 변천의 중요요인으로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 인구이동, 사망력 저하, 기술전파, 가족계획사업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인구성장과 변천을 다루면서 집필자는 두 가지 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pp. 67-68). 즉 한국의 인구변천을 논하면서 일부 인구학자들이 논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고 있다: a) 인구변천에서 과연 사망률의 감소가 출산률의 감소에 항상 선행하는가 하는 문제와, b) 사망률의 감소와 출산률의 감소간에 인과관계가 아닌 의사상관관계가 성립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집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1910년을 전후하여 조사망률이 조출생률보다 먼저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나 1910-1925년 사이에 보건위생수준의 향상에 따라 조출생률은 상승한 반면에 조사망률은 감소하였고, 이 같은 현상은 1950년대 후반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망률이 일정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출산률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구학자들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고전적인 인구변천이론과는 달리 한국의 인구변천 양상을 논함에 있어 사망률과 출산률간에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며, 굳이 이들 양자간의 관계를 논한다면 미약한 상관관계 내지는 의사상관관계가 성립될 뿐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의 경우 사망률 감소와 출생률 감소간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을까? 먼저 1910-1925년 사이의 조사사망률 감소는 당시 일반 국민들 스스로가 보건위생의 중요성을 절감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일제가 한반도를 식민지화하기 위한 한가지 방편으로 반강제적으로 실천에 옮긴 각종의 보건위생향상방안의 결과로 파생된 것일 뿐이다. 또한 1950년대 후반의 조사사망률 감소현상 역시 한국전쟁의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일종의 “반 타의적인” 보건위생정책의 결과물일뿐 국민들 스스로가 보건위생에 대한 생각이 향상된데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또 한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1960년대 초에서 시작하여 후반부에 이르기까지 출생률의 감소속도는 사망률의 감소속도를 훨씬 앞지르고 있었던 것은 사망률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출생률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사망률의 감소와는 별도로 1962년부터 정부주도로 외부로부터 수입된 가족계획사업의 “덕분”이었다(Connelly, 2003: 124). 즉 국민들 스스로가 산아조절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기 때문에 출생률이 자연스럽게 감소한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와 같은 새로 개발된 피임도구나 피임약제의 실험무대로 대만이나, 인도, 파키스탄과 함께 한반도의 일부가 제공된 결과이었을 뿐이다. 이 같은 반강제적인 산아조절정책의 후유증으로 1980년대 말까지도 한국의 상당수 유배우 부인들은 터울조절이 아닌 단산목적으로 피임을 하고 있었다. 이처럼 노우테스틴 등이 주장하는 인구변천가설은 인위적으로 야기되는 인구변천을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알게된다.

제 3장의 출산력 부분에서는 이제까지의 출산력 변천양상을 살펴보고 장래의 출산률 변동예측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장의 집필자는 한국의 출산력 변동양상을 제 1단계 (1960-1985)와 제 2단계 (1986-2000)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즉 합계출산률이 대체수준이하로 내려간 분기점을 순수히 인구학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거시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물론 이 분기점을 1983년으로 잡을 것인지 또는 1985년이나 1987년으로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인구학자들간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인구학적 측면이 아닌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장래 출산률 변동의 예측부문에서는 봉가르츠모형을 토대로 21세기 전반부의 저출산 추이를 예측하고 있다. 즉 앞으로 부부들이 “피임이나 인공유산에 더욱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되어 원치 않은 자녀수의 출산 촉진효과가 사라지게 된다면 현재의 저 출산경향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짙다

는 해석이다.

그러나 많은 인구학자들(Bongaarts & Bulatao, 2000: 56-62; Casterline, 2001: 31-44)이 지적하고 있듯이 출산률의 변동은 인구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단순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률의 변동이나 수요이론으로 설명될 수 없음은 1970년대의 인도네시아나 태국의 출산률 변동과 1980년대 방글라데쉬나 네팔의 출산률 변동에서 실증되고 있다. 출산수준의 변동은 때때로 경제사회발전에 둔감(Insensitive)할 뿐 아니라, 더욱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각종 경제사회발전이 선형상태를 유지하면서 지속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가 때로는 완전 정체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뒷걸음치기도 하는 예측불능의 비선형(non-linear)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즉 선진국, 후진국 가릴 것 없이 사회경제적인 요인 못지 않게 특정사회고유의 가치관과 같은 문화적인 요인이 출산률 변동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좀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출산률의 변동에 대한 논란을 인구학자들이나 경제학, 사회학자들에게 “일임해” 두기보다는 오히려 인류학자나 역사학자들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만 같다. 단적인 예로 Casterline(2001: 36)이 주장하는 세칭 궤적의존(path dependence)이론과 사회연쇄반응효과(social effects)를 살펴보자.

궤적의존이론에 따르면 출산률의 변동은 다른 일련의 사회변동과 마찬가지로 미리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일정사회에만 적용되는 특성의 궤적에 따라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특성의 궤적이란 그 사회에 몸을 담고 있는 구성원들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상을 결정해주는 사회문화적 규범이나 가치관을 뜻한다. 즉 한국의 예를 들면 남아선호사상이라든가 또는 터울조절보다는 단산목적으로 피임을 하려는 경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어느 사회든지 일단 그 사회에 부합하는 궤적에 진입하게 되면 지극히 빠른 속도로 출산률이 감소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출산률의 감소 속도는 지극히 완만해 지거나 역으로 증가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 사회연쇄반응효과란 출산률의 변동속도는 일종의 사회감염(social contagion)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사회구성원의 어느 한 사람이 특성의 피임방법이 효율적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게 되면 이 같은 소문이 근거가 있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빠른 속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피임방법을 선호하게 되어 출산수준이 예상외로 빠른 속도로 급강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일종의 사회적 선전효과를 통한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이 출산률 변동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출산률의 변동은 부부 개개인의 치밀하고 “효율적인” 출산계획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전체를 관통해 흐르는 장기간에 걸친 시대적인 흐름이나 비교적 단기간에 끝나는 사회적 유행에 의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제 4장 사망력 분야에서는 Omran의 역학변천모형을 토대로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의 사망력 변천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1970년대까지는 한국의 사망력 수준이 극동모형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사망수준이 낮아지면서 서구형의 사망수준으로 바뀌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차별사망력을 보면 1970년대에서 2000년에 이르기까지 55~64세를 제외한 전체 연령층에서 사망수준과 교육정도간에 역의 관계가 성립됨을 알 수가 있고 이러한 양상은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혼인상태별 사망력의 차이를 보면 유배우 인구의 사망수준이 다른 혼인상태의 그것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어 돌깡과 훌바끄가 주장하는 건강한 사람일수록 결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른바 “자동선별”(self-selection)의 원리가 여기서도 적용됨을 알게 된다. 따라서 이 장의 집필자에 따르면, 앞으로 예견되는 한국의 남녀 미혼인구구성비의 증가는 오히려 사망수준을 높여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리라는 주장이다.

한국의 사망수준이 극동모형에서 서구형 모형으로 근접해 가고 있긴 하지만 2000년의 인구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40대 이후 한국 남자의 사망률은 다른 연령층이나 여자의 사망률보다 훨씬 높으며 40~49세 남성 사망률은 동일 연령층 여성 사망률의 2.9배에 달한다.

주요 사망원인이 1960년대의 전염성 질환에서 1990년대 말에는 퇴행성 질환과 생활양식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질환으로 바뀌어 지고 있고, 평균수명의 지속적인 연장으로 노령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85세이상 노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생명표의 작성(Mesle & Vallin, 2002: 603-632)작업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현상은 제 6장의 성과 연령구조의 변화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1975년까지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유소년 인구 100명당 10명 미만의 수준이었으나 1995년에 25.8명, 2000년에는 35명 수준으로 증가 일로를 걷고 있고, 잠재 노인부양비(potential support ratio) 역시 1975년 16.8명으로 정점에 있다가 2000년에는 10명으로 감소하였고, 그리고 2030년에는 2.8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즉 203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약 3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

게 된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성비불균형은 1925년의 83.6에서 1980년에는 59.4, 그리고 2000년에는 61.8로 약간 완화되었으나 성별 평균수명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한 노인인구의 성비불균형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 7장 혼인력에서 종전까지는 여성의 미혼률이 남성의 미혼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최근에 여성의 미혼률이 빠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양상이 여성의 교육수준향상이나 경제사회활동 참가률의 증가로 일본의 경우처럼(Raymo, 2003: 83-103) 계속 가파른 상승추세를 유지할 것인지 단정 할 수는 없으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최근 10년사이 무학과 초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초혼연령이 다른 어느 교육수준의 초혼연령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혼이 증가하면서 초혼남과 재혼녀의 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1970년의 0.9%에서 2001년에는 5.6%로 계속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제 8장의 가구형태변동을 다룬 부분은 한국사회가 지난 20년간 경험한 사회변동을 가장 적나라하게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것 같다. 먼저 가구원 구성면에서의 변동을 보면 전체가구에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속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한 반면 3세대 가구의 가구원 비율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년동안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속하는 가구원의 비율이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서 더욱 높아지고 있어 자녀들을 도시로 내보내고 노부부만이 농촌지역을 지키는 이른바 농촌지역의 “사회적 공동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1980-2000년 사이의 성별에 따른 가구주 비율(household headship rate)을 보면 남성 가구주 비율은 59.2%에서 69.9%로, 여성 가구주 비율은 8.3%에서 15.0%로 다같이 증가하였다. 이는 1인 가구나 소규모 가구수가 증가한 데 기인하며, 특히 여성 가구주비율의 증가는 미혼여성이 단독가구를 형성하거나 사별 또는 이혼으로 인해 가구주가 되는 경우가 빈발한 것에서 연유한다.

제 9장에서 1980-2000년간 학력별 인구구성비의 변동을 보면, 초, 중고등 졸업자의 비율은 감소하고, 초급 및 대학 졸업자의 비율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교육의 질적 향상의 척도라 할 수 있는 교원 1인당 학생수의 감소는 초등학교의 경우 1980년의 47.5명에서 2000년에는 28.7명으로, 그리고 같은 기간에 인문고등의 경우 33.9명에서 20.9명으로, 실업고등의 경우는 32.6명에서 18.2명으로 감소하였다.

제 10장과 제 11장에서는 각각 경제활동과 직업구조, 그리고 노동력의 변

화를 다루고 있다. 먼저 1995-2000년 사이 직업구조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전문직종과 판매 및 서비스직종에 종사하는 인구는 증가한 반면에 기술직, 기능직과 같은 일차산업에 종사한 인구는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산업구조에서 나타난 성별변화를 보면, 1995-2000년 사이 남성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었던 직종은 한결같이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순서이었으나, 여성의 경우는 1995년에 가장 많이 종사하였던 분야는 농업, 임업, 제조업, 도·소매업 순이었으나 2000년에는 도·소매업, 농업, 임업, 제조업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력변화를 다루는 부문에서 집필자는 노동력 개념의 가장 핵심내용인 경제활동인구의 개념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ILO에서 사용하였던 경제활동인구의 개념이 1954년 이후 여러 번 개정되었을 뿐 아니라 국내의 인구센서스에서 사용되었던 경제활동인구의 의미마저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어 부분적으로 인구 센서스 자료의 시계열적 분석이 어려움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집필자는 활용가능한 자료를 손질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첫째, 1980-2000년 사이 남녀 청소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다같이 감소하였으나, 둘째, 같은 기간에 20세 이상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감소한데 반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증가하였고, 셋째, 25-34세 층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25-34세 층 여성성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증가로 인하여 1995년까지 유지되던 M-자형 또는 쌍봉형 여성경제활동곡선이 2000년부터는 전도된 U-자형으로 근접하고 있을 가능성을 저울질 해보고 있다.

그러나 집필자는 최근에 국내에서 대두되고 있는 생애사(life course) 방법을 적용하여 코호트내(intra-cohort) 즉 종단적인 분석을 시도해 보기 이전에는(김영옥, 2002: 5; 은기수 외, 2002: 107; 한준, 2002) 여성의 경제활동양상이 M-자형에서 전도된 U-자형으로 일대 변혁을 거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U-자형으로 근접하는 원인이 한편으로는 최근에 여성들이 취업하는 직종의 변화(노동의 이질성)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또 한 편으로는 계속 증가하는 여성의 만혼 경향 즉 여성 결혼연령의 분산에서 기인 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코호트간(inter-cohort)의 차이가 코호트내(intra-cohort)의 차이로 잘못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제 12장의 고령화와 노인인구부문을 보면, 1970-2000년 사이 65-74세 노인인구비율은 72.1%에서 68.0%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에 7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7.9%에서 32.0%로 증가하고 있어 인구의 노령화뿐 아니라 인

구의 급속한 고령화를 걱정해야 할 단계에 다다라 있다. 한편 노부부 중심의 1세대가구나 1인 단독가구에 속하는 노인의 비율이 1990-2000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여 노인 혼자 거주하는 1인 단독가구 노인인구의 비율은 1990년의 8.9%에서 2000년에는 16.8%로 증가하였다.

제 13장과 14장의 인구분포, 인구국내이동, 도시화에서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2000년 현재 서울과 경기도인구는 전국인구의 21.5%와 24.8%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하던 서울인구의 비중은 1990년부터는 감소추세로 돌아서, 1995년에는 22.9%로, 그리고 2000년에는 21.5%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전반기부터 서울의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경기도로의 인구집중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계속되던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집중 가속화 속도는 1995년을 고비로 완만해 지고 있다.

인구이동별 이동자의 특성을 분석해보면 남성의 경우는 여성에 비해 1차 및 2차이동과 귀환이동의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는 정착이동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대학이상의 고학력자층에서 2차이동이 가장 빈번히 나타나고 있어 교육수준과 이동성향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엿보이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도시화를 논하면서 집필자는 첫 번째 단계로 1915-1944년 사이 농촌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1% 이하였으나 도시지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7%를 기록하였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1945-1960년 사이로 한국전쟁에 따른 과잉도시화와 수위도시화가 시작되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1960-1990년 사이로 서구사회가 지난 200년간 거처온 도시화과정을 단 30여 년 만에 완료한 이른바 압축적 도시화단계이다. 특히 1960년대 개발도상국의 평균 도시화율이 21.9%에서 25.8%로 증가하였는데 반하여 같은 기간 한국의 평균 도시화율은 28.0%에서 41.2%로 급증하였으며, 그 후 계속 증가추세가 계속되어 1980년에는 57.3%로 그리고 1990년에는 74.4%로 증가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1990년 이후의 단계로 성숙된 도시화로의 이행단계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즉 압축적 도시화단계에서 매 10년마다 20%정도씩 증가하던 도시화율이 1990년대에는 5.3%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제 15장의 통근·통학 및 주간인구 분석에 따르면 1995-2000년 사이 전국에서 주간인구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예상했던 바와 같이 서울의 중구이다. 즉 중구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주간에 중구에서 생업이나 학업을 위해 유입되는 인구가 상주인구의 규모에 비해 크다는 뜻이다. 또한 1995년에 비해 2000년에는 모든 직종에서 비통근·통학인구비율은 감소경향을 보이는

데 반해 통근·통학인구비율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5-2000년 사이 서울시내의 주간이동 인구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은 강북에서 강북으로의 이동유형이다. 같은 기간 강남에서 강남으로, 그리고 강북에서 강남으로의 주간이동 인구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제 16장 종교부문에서는 1985년과 1995년의 인구센서스 2% 표본자료를 토대로 10년 사이 종교별 인구분포상태 변화를 기술하고 있다. 다른 분야와는 달리 10년이란 단기간에 걸친 종교별 인구분포의 변동을 조사하는 것이 무의미 할 수도 있겠으나 1985년에서 1995년 사이에 무종교라 응답한 비율이 54.8%에서 47.4%로 감소한 것은 흥미있는 현상이다. 다만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응답자들이 자신의 종교를 “불교” 또는 “기독교(개신교)”라 응답할 때 이와 같은 응답에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부여해야 할 것인지 의문시된다.

1985-1995년의 지역별 종교구성을 보면 불교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대구, 부산, 경남, 경북지역이며, 불교인구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도 지역으로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전라도 지역은 개신교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서울과 경기지역도 개신교인구가 불교인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남지역에서 유교인구가 가장 높게 집계되고 있다.

제 17장 정보화부문은 2000년 인구센서스에 처음으로 삼입된 정보화 항목과 1994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정보문화진흥원(구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실시한 정보화 실태조사를 토대로 분석된 자료를 담고 있다. 2000년의 인구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컴퓨터나 인터넷 이용률은 30대 미만층에서 가장 높고, 30대의 이용률은 30대 미만 보다는 낮으나 40대 이상 인구의 그것 보다는 높다. 2002년 현재 전국 가구의 60% 이상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고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제 18장의 인구 및 가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2023년에 5,068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하여 2050년에 4,434만 명 선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생산연령층인구(15-64세)는 2016년에 3,638만 명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에는 2,442만 명이되며,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는 2000년의 340만 명(전체 인구의 7.2%)에서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34.4%를 차지하는 1,527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가구수의 증가는 2023년까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가구주의 성별, 연령별 구성도 여성화와 노령화로 바뀌어 질 가능성이 짙다. 즉 2000-2020년 사이 여성 가구주는 18.5%에서 21.9%로,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주는 12.1%에서 21.0%로 증가할 전망이다. 가구주의 연령도 2000년의 여자 50.5세, 남자 45.8세에서 2020년에는 여자 56.0세 남자 51.3세로 높아질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평균 가구원 수는 2000년의 3.1명에서 2020년에는 2.7명으로 감소하며, 2010년부터는 2인 가구 수가 3인 가구 수 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제 19장 인구정책은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이 구성될 신 인구정책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출산 장려정책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즉 역사적으로 보아 반강제적인 정부차원의 출산 장려책이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스웨덴의 출산 장려책을 보자(Hoem & Hoem, 1999: 325). 1980년대 중반 스웨덴정부는 강력한 출산 장려책을 동원하여 1983년에 1.6의 수준에 머물러있던 합계출산율을 1990년대 초에 2.14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하였으나 스웨덴의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지자 1996년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1.6의 수준으로 단숨에 곤두박질을 하고 말았다. 구 소련의 경우도 1936년 이후 줄곧 출산 장려책을 고집하여 겨우 합계출산율을 “위험수준”위로 유지 할 수 있었으나 구 소련이 붕괴되자 1990년 합계출산율이 1.9선으로 추락하였고, 다시 1993년에는 1.4선으로, 그리고 2002년에는 1.3의 위험수위 이하로 주저앉았다. 즉 경제·사회적 안정이 없이는 어떤 출산 장려책도 그 실효를 거둘 수 없음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

Ⅲ. 맺음 말

한국의 인구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집대성한 《한국의 인구》1권과 2권을 읽고 난 후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서두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한국인구 75년사는 해방전인 1925-1945년도와 해방후의 1946-2000년의 두 기간으로 따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한국의 인구》에서 1925-1945년의 자료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1946-1966년의 자료도 깊이 있게 분석되지 않았으며, 거의 대부분의 장에서 다루어진 핵심자료는 1970-2000년의 것이었다. 즉 이번 연구는 한국인구 75년사가 아니라 한국인구 30년사였다.

그 다음 《한국의 인구》의 대상 독자층이 일반인, 전문가 집단, 그리고 대학이상의 학생들을 모두 망라하고 있어 일부 자료는 피상적인 분석만 이루어지고 있는가하면 일부 자료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지나치게 어려운

분석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정녕 이들 세 종류 독자층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책의 전반적인 구성을 보면 제 5장의 국제이동과 해외한인사회, 제 13장의 인구분포와 국내인구이동, 제 14장의 도시화는 3개의 각기 다른 독립된 장으로 분리시킬 것이 아니라 “인구이동”이란 단일 장에 포함시키되, “인구이동”을 국외인구이동, 국내인구이동, 도시화의 3개 세부영역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5장의 국제이동에서 다루어 진 해외한인사회는 차라리 부록으로 게재하였더라면 보다 짜임새가 있었을 것이다.

제 10장의 경제활동, 직업 및 산업과 제 11장의 노동력은 분리하지 말고 단일 장으로 통합하거나 아니면 제 11장의 노동력부문에서 단순 노동력에 해당되는 내용은 제 10장의 경제활동, 직업 및 산업에 통합하고 제 11장에서는 “여성노동력”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새로운 주제로 다루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제 11장의 노동력에서는 한국의 여성노동력이 M-자형곡선을 유지하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p. 415) 노동생명표 정도는 작성을 시도했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분석 내용에서 벗어나는 문제이긴 하지만, 《한국의 인구》가 통계청과 한국인구학회에 의하여 공동으로 이루어진 연구사업이었다면, 응당 발행처는 통계청이 되겠으나 연구사업의 핵심 역할을 하였던 한국인구학회의 명칭이 책의 표지에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했었다.

집필진을 보면, 사회학자들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고 노동력이나 산업구조 등을 다루는데 필연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한국인구학회 소속 경제학자들의 이름을 찾아 볼 수 없는 것 또한 특이한 현상이다. 교육부분은 교육개발원 소속의 한국인구학회회원의 참여가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마지막으로 인구학 용어가 통일되지 않아 앞으로 인구학을 연구할 후학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예를 들면 “연령별 특수출산율”(p. 83), “생애 미혼율”(p. 110) 등의 용어는 하루 빨리 정리되어야 하겠다. 지역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자료의 출처는 1996년 것인데 표에 담긴 내용은 2000년도까지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 (p. 175, 표 5-7) 거주형태에서 (p. 263) “양부모”란 용어는 “養父母”와 “兩父母”를 동일시하는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편모(偏母)”나 “환부(鰥夫)”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영옥(2002), “여성의 동태적 노동공급: 취업연속성과 첫 노동시장 퇴출 행태를 중심으로,” 《한국의 인구》 25(2).
- 서울대 출판부(1971), 《호구총수》.
- 은기수·박수미(2002), “여성취업이행경로의 생애과정 sequence분석,” 《한국인구학》 25(2).
- 이삼식·박중서·하미영(2002), 《환경변화에 따른 인구주택총조사 개선방안》.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중앙일보(1996), “일제의 조선감시 비밀지도 발굴,” (3월 1일, 1면, 22면)
- 한준(2002),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직업이동: M-자형 여성 취업곡선의 함의,” 2002년도 후기 사회학대회 발표논문
- Bongaarts, John, Rodolfo A. Bulatao (eds.)(2000), *Beyond Six Billion: Forecasting the World's Population,*”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Casterline, John B.(2001), “The Pace of Fertility Transition: National Patterns in the Second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in *Global Fertility Transition,* edited by R. A. Bulatao, J. B. Casterline, New York: Population Council
- Connelly, Matthew(2003), “Population Control in History: New Perspectives on the International Campaign to Limit Population Growth,”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January), 45(1)
- Hoem, Britta, Jan M. Hoem(2000), “Fertility Trends in Sweden up to 1996,”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Below Replacement Fertility,* New York
- Mesle, France, Jacques Vallin(2002), “Comment Ameliorer la Precision des Tables de Mortalite aux Grands Ages?” *Population* 57(4/5).
- Raymo, James M.(2003), “Educational Attainment and the Transition to First Marriage Among Japanese Women,” *Demography* (February) 42(1).
- U.S. Census Bureau(2002), Current Population Survey, Technical Paper, 63RV (Design and Methodology) (March).